

탈냉전기 일본의 방위정책 결정과 게이단렌의 역할*

: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 발행 「특보」를 중심으로

오동룡 _ 조선뉴스프레스 월간조선본부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냉전기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의 활동
- III. 나카소네 방위청장관 취임과 방위생산위원회와의 협력
- IV. 탈냉전기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의 활동
- V. 맺는말

국문초록

『방위생산위원회 특보』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의 영향력은 방위성(방위청)을 통해 주로 이뤄지며, 방위성과 재계의 접점(接點)에 해당하는 방위장비국산화간담회, 심의회, 위원회와 같은 외곽조직, 즉 정부 부처와 민간기구를 연결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계 원로로 구성된 방위생산위원회 간부들은 정부 성청, 특히 방위산업의 비대화를 우려한 재무성(대장성) 등 관료집단의 반대를 설득해가며,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가는 데 성공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이 결정되는 과정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4차방을 계기로 일본의 방산업체들은 본격적으로 자주방위를

* 본 논문은 필자의 2015년 국방대 박사학위 논문(『일본의 비군사화규범 형성과 변천과정에서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의 영향력 연구』, 서울: 국방대학교) 가운데 “제4장 비군사화규범 형성기 게이단렌의 활동”과 “제5장 비군사화규범 완화가 게이단렌의 활동”을 보완해 작성한 것임.

추진하며 기술축적을 통해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다.

특히 1982년 나카소네 총리가 집권하면서 1985년을 시점으로 59중기업무계획을 추진한다. 이 때 나카소네 총리는 자신의 자주방위 구상을 방위계획에 담으면서 방위산업계는 활로를 찾는다. 이를 기화로 재계는 끊임없는 스킨십을 통해 나카소네 총리로 하여금 방위비의 GNP 대비 1%의 벽도 뛰어넘으면서, 미국과 맺은 미·일 기술제공협정을 통해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경제적 전성기를 구가하며 방위산업의 기술력 축적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계대상이 된 일본은 F-2 전투기 공동개발에서 미국과 국익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 전투기 독자생산에 나섰던 일본의 항공기업계는 미국의 압력에 일본정부가 굴복하면서 공동생산을 하는 것으로 낙착되자, 공동개발을 통해 민항기 제작을 위한 기술력 축적에 나선다.

『방위생산위원회 특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후 일본의 방위산업은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상황적 변화를 잘 포착한 재계의 움직임이 주효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본의 방위생산위원회가 일본의 방위정책 결정에 주요한 행위자(actor)로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특보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베 정권 들어 등장하고 있는 우경화 정책들은 최근 발표된 '무기수출3원칙 폐지' 조치를 계기로, 그간 내수에만 묶여 있던 일본 방위산업의 대상 범위가 세계 무대로 확대돼 향후 방위산업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방위정책, 방위산업,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 방위생산위원회 특보, 무기수출3원칙, 방위계획의 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I . 들어가며

2011년 11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2014년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967년 외 조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공표한 ‘무기수출 3원칙’¹⁾을 사실상 폐기하며 ‘방위장비 이전 3원칙’²⁾을 새로이 공표하자, 일본 방산업계는 방산수출의 기대감으로 한껏 고무돼 있다. 아베 내각은 자국의 하이테크 기술 기반을 앞세워 무기수출을 아베노믹스의 ‘불화살’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다.

1967년 선언한 무기수출 3원칙이라는 족쇄를 방산업계가 50년 만에 푸는 데 성공한 비결은 게이단련(経団連) 방위생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1945년 패전 이후 해체됐던 일본의 방위산업이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다

1) 1967년 4월 21일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중의원 결산위원회에서 하나야마 지카요시(華山親義) 사회당 의원이 “도쿄대가 개발한 로켓을 인도네시아, 유고슬라비아에 수출하는 것과 관련, 무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수출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공산권을 대상으로 한 경우, 국제연합 결의에 의해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국제분쟁 중인 당사국 또는 그럴 위험이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는 수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해 무제한적으로 수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第55回衆議院決算委員会 第5号, 1967.4.21; 森本正崇, 『武器輸出三原則入門—「神話」と実像』(東京: 信山社, 2012), pp. 20-21.

2)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경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원칙1), 엄격한 정보공개 하에서 평화공헌 및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에 도움이 되는 경우 무기 수출을 인정하며(원칙2),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으로의 재이전에 대한 관리방안이 확보될 경우로 한정하는(원칙3) 등 세 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됐다. 国家安全保障會議決定/閣議決定(2014)를 참조.

시 본 궤도에 오르고,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방산업체들이 방위청(성)을 중심으로 한 관료집단과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해 나가면서 일본의 방위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게이단렌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재계 조직이 미국 그리고 일본의 관계(官界), 정계(政界)라는 주요 행위자와 함께 일본의 방위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했다는 것을 방위생산위원회가 발행한 자료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탈냉전 시기를 전후해 일본정부가 방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역할에 포커스를 맞췄다. 1967년부터 1985년까지를 소위 '비군사화규범(non-military norm)³⁾ 형성기'로 규정하고, 일본정부가 1967년 무기수출 3원칙을 선포하면서 이후 비핵 3원칙, 전수방위의 원칙 등 비군사화 규범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방산업계가 생존을 위해 활동하는 지구노력에 주목했다.

6·25전쟁에 이어 베트남전의 발발로 일본의 방위산업은 또 한 번의 활로를 찾는 듯했으나 1967년 사토 내각의 무기수출 3원칙 발표에 의해 뒷서리를 맞고 말았다. 그러나 일본 방산업계는 굴하지 않고 국산화를 통해 기술력을 높이는 한편, 게이단렌을 통해 통상성과 의회, 그리고 방위

3) 비군사화(Anti-Militaristic)라는 말은 크리스토퍼 휴즈(Christopher W. Hughes)와 글렌 후크(Glenn D. Hook)가 그의 저서에서 사용한 용어다. 군대(軍隊)의 요소를 탈색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규범은 원칙(principle)보다는 훨씬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두 말의 합성어인 비군사화규범은 전후 일본의 평화헌법하에서 자위대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했다. 일본은 1946년 제정한 헌법 제9조 1항을 통해 국가정책으로 전쟁을 포기할 것을 선언했고, 제2항에서 육해공군 전력의 보유를 금지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주권을 회복한 일본은 1954년 육해공 자위대를 창설했지만, 헌법상의 평화주의 정신에 따라 '비핵 3원칙',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 '무기수출 금지 3원칙', '전수방위의 원칙', '기반적 방위력 개념', '방위비 GNP 1% 이내의 원칙', '공격용 무기 비보유의 원칙' 등 소위 비군사화규범을 잇달아 선언했다. 박영준, 「일본 방위산업 성장과 비군사화규범들의 변화」, 『한일군사문화연구』 제 18집(2014)을 참조.

산업 재건에 관심을 가진 보수인사들의 인맥을 적극 활용해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한다. 특히 1972년부터 시작된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이하 4차방)이 결정되는 과정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4차방을 계기로 일본의 방산업체들은 본격적으로 자주방위를 추진하며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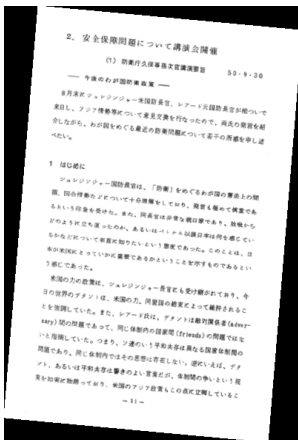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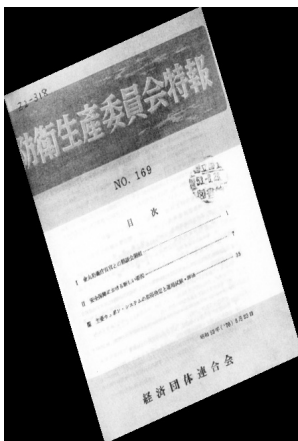
이 시기는 방위정책 면에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방위청 장관이 ‘자주국방론’의 기치를 내걸고 방위산업을 육성한 반면, 방위청 내부에서 구보 다쿠야(久保卓也) 방위사무차관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기반적 방위력’으로 방위력 증강에 제동을 걸면서 양측이 대립한 시기였다.

본격적인 탈냉전 시기로 진입하는 1985년부터 1997년까지의 시기는 일본에게 있어서 ‘비군사화규범 완화기’에 해당한다. 대외적으로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경제적 전성기를 구가하며 방위산업의 기술력 축적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계대상이 된 일본이 기술 수혜국(受惠國)에서 기술 공여국(供與國)으로 전환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일본의 방위산업을 제약하던 비군사화규범들이 서서히 이완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다. 1985년을 기준 시점으로 삼은 까닭은 1985년 나카소네 총리가 집권하면서 시작한 59중기업무견적(이하 59중업)에 ‘나카소네 구상’으로 알려진 나카소네 총리의 자주국방 비전을 반영하면서 비군사화규범이 이완하는 조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은 나카소네를 대표로 하는 일본의 정치인들에게 방위비 증액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나카소네는 ‘론야스(로널드 레이건-나카소네 야스히로) 관계’로 불릴 정도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의 인간적 친밀도를 바탕으로 미·일 안보 결속을 다져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방산업계와 협력해 방위장비 국산화를 달성해 나간다. 나카소네 총리의 방위정책에 의해 일본은 오랜 동안 넘지 못한 ‘방위비의 GNP 대비 1% 비율’의 원칙도 허물어지고, ‘무기수출 3원칙’도 대미 기술공여라는

이름으로 완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사례는 미국과 함께 차기지원전투기를 개발한 FS-X 개발계획이다. FS-X 개발계획 과정에서 미·일이 표출하는 요구사항들은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틈바구니에서 일본 방위산업체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림 1〉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 발행 『특보』4)



中會根防衛庁長官就任祝賀ならびに
防衛庁首脳との懇親パーティー
—防衛産業関連5団体共催—

当防衛生産委員会では、日本航空工業会、日本造船工業会、日本兵器工業会、日本ロケット開発協議会と共催で、1月23日(金)午後4時30分より、経団連会館ダイヤモンドルームにて、新任の中會根防衛庁長官および土屋防衛庁政務次官はじめ防衛庁首脳を招き、中會根防衛庁長官就任祝賀ならびに同庁首脳との懇親パーティーを開催した。同パーティーには、船田中防衛装備国产化懇談会会長はじめ、主客あわせておよそ230名の多数が出席し、非常な盛会であった。席上、同野防衛生産委員会委員長、船田防衛装備国产化懇談会会長および中會根防衛庁長官より、それぞれ次のような挨拶があった。

〈同野防衛生産委員会委員長挨拶〉

本日は、私も経団連防衛生産委員会・日本航空工業会・日本造船工業会・日本兵器工業会・日本ロケット開発協議会の会員一同が、中會根康弘防衛庁長官のご就任をお祝い申しあげるとともに、新任の土屋義彦防衛庁政務次官はじめ防衛庁首脳のみなさまと懇親の機会をもちましたところ、中會根長官はじめ、日頃より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諸先生方、および防衛庁首脳のみなさまには、ご多忙のところをご出席いただき、まこと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さて、ご存じのように年末選挙における自民党の大勝利のうちに、ついに1970年代を迎えたわけですが、この70年代という時代

— 1 —

4) 방위생산위원회가 발행한 특보 표지와 본문. 나카소네 야스히로 방위청장관 취임

분석을 위해 필자는 경단련 방위생산위원회가 발행하는 『특보(特報)』(그림 1)라는 형식의 스페셜 리포트를 활용했고, 그곳에 나타난 구체적인 팩트들을 통해 방위정책의 결정과정에 재계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보』는 1953년 4월 처음 발간된 이래, 1955년 7월 『방위생산위원회 특보』로 제호를 바꿔 방산업계 현안을 회원 사들에게 속보(速報) 형식으로 알리는 매체였다. 요컨대 일본의 방위정책 결정의 주요 행위자들, 예컨대 정계-관계-재계 간의 역학관계를 밝히는 본 연구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방위정책의 행보를 예측하게 할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 냉전기 게이단련 방위생산위원회의 활동

1. 방위생산위원회의 위상

먼저, 일본의 방위정책 전개과정에서 재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방위정책 결정에 간여한 일본의 정부기구(예컨대 국가안전보장회의, 방위성, 외무성), 정치계(자민당 방위족⁵⁾ 의원), 재계(게이단련, 방위생산

임 직후인 1970년 1월 23일 방위생산위원회가 나카소네 장관 취임 축하파티를 열었을 때 나카소네가 밝힌 방위정책 운영방침을 특보 122호에 실었다(오른쪽 큰 사진). 왼쪽 아래 사진은 1975년 9월 11일 구보 다쿠야 사무차관이 방위생산위원회를 방문해 자신의 ‘기본적 방위력’ 방침을 방산업체 관계자들에게 설명한 특보 151호(1975년 11월 발행)다(자료: 일본 국회도서관).

- 5) 방위족(防衛族)이라던 자민당 정무조사회의 17개의 부회를 중심 무대로 활동하는 족의원(族議員) 가운데 “방위정책 또는 관련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입장에 있는 중견의원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부터 방위 문제에 강한 관심과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방위족 의원이 등장해 국방3부회(국방부회, 안전보장조사회, 기지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국회의원은 표와 크게 관련이 없는 방위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 때문에 방위예산 등 일부 문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또 방

위원회) 등 주요 행위자 가운데 게이단렌과 방위생산위원회(재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국가기구 내의 주요 행위자인 정치인과 관료 이외에 일본 방위정책에서 나타나는 재계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일본 방위정책의 주요 행위자이자 또 하나의 독립변수인 것이다.⁶⁾ 일본의 기업들은 그 출현 당시부터 정계와 관계, 그리고 심지어 군부세력(구 일본군과 자위대 출신들)과 유대를 가지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⁷⁾ 게이단렌은 일본 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경제인 조직이다. 회원으로는 일본철강연합, 일본자동차연합 등 업종별 전국 단체와 미쓰비시중공업을 필두로 하는 방위산업체들까지 망라한 거대 조직이다. 게이단렌은 자민당의 최대 후원자로서 각 분야의 정책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⁸⁾ 게이단렌 회장은 “정계를 결속하는 사람이 총리라면, 산업계를 결속하는 경제리더는 게이단렌 회장”이라는 의미에서 ‘재계의 총리’로 불린다.⁹⁾

전후 요시다 내각 이후 일본정치에서 경제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였

위청 차관 출신 의원이 방위족의 주요 멤버를 독점하면서 주로 방위청의 입장을 정치무대에 대변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猪口孝·岩井奉信, 『「族議員」の研究—自民黨政權を牛耳る主役たち』(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87), pp. 119~120.

6) Daniel I. Okimoto, *Between MITI and the Market: Japanese Industrial Policy for High Technology*(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를 참조.

7) Michael J. Green, *Arming Japan*(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pp. 26·28.

8) Yanaga Chitoshi, *Big Business in Japanese Politics*(Yale University Press, 1968), p. 35.

9) 초대회장 이시카와 이치로(石川一郎)는 패전의 혼돈 중에서 게이단렌을 일으켜 세우고 전후부흥을 위한 레일을 깔았고, 2대 회장 이시카자 다이조(石坂泰三) 도 시바 사장은 외국 자본에 겁먹은 재계를 질타하면서 자본자유화를 향한 길을 열었다. 3대 회장 우에무라 고고로는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된 관민협조 노선을 확실히 했고, 4대 도쿄 도시오(土光敏夫)는 석유위기의 대변혁기를 맞아 노도와 같은 행동력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7대 히라이와 가이시(平岩外四), 그리고 세계 기업인 도요타자동차 총수 도요타 쇼이치로(豊田章一郎)가 8대 회장으로 취임해 규제완화에 노력했다. 고가 준이치로·오오타 마코토 공저, 박균도 역, 『일본을 움직이는 재계의 싱크탱크 經團連』(서울: FKI미디어, 2000), pp. 202~203.

다. 따라서 일본의 재계는 국내의 현안에서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챙겨야 했다. 재계는 정부가 보내는 해외 경제사절단, 무역협상의 당사자, 심지어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와의 배상금 협상에서도 일본정부를 대신해 일본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활동했다. 따라서 일본의 방위정책 결정을 정책 결정의 하나의 과정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일본의 재계라는 중요한 행위자를 간과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계이단렌은 기업활동과 관련한 경제정책, 정치·사회, 산업기술 및 정책, 노동정책 및 노동법제, 환경·에너지, 국제협력 등 11개 분야를 총괄하는 정책위원회 아래 70개의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방위생산위원회는 현재 방위산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산업기술본부 산하에 설치돼 있다. 방위생산위원회는 방위생산에 관여하는 업체들의 이익집단이자 총집합체로서 방위생산에 관한 기초자료의 조사, 방위생산에 종사하는 기업 상호간의 연락 조정, 그리고 방위생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하고 있다.¹⁰⁾

방위생산위원회는 내부 심의회에서 방산업체들의 요구를 안(案)의 형태로 다듬어 이를 총합정책위원회에 상정하고, 계이단렌 또는 방위생산위원회의 단독 의견으로 발표한다. 방위생산위원회는 통상 방위산업 비중이 높은 기업체의 대표자 또는 계이단렌의 임원이 맡고 있다.¹¹⁾

방위생산위원회는 6·25전쟁 특수를 계기로 탄생했다. 전쟁 특수를 계기로 미·일관계가 발전하자, 1951년 2월 9일 일본 재계는 미국 측에 미·일경제제휴간담회(美日經濟提携懇談會)를 상설화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이후 미국과 일본은 간담회 명칭을 미·일경제협력간담회(美日經濟協力懇談會)로 바꿨다. 미·일경제협력간담회 산하에 총합정책위원회, 방위생산위원회, 아시아부흥개발위원회 등 세 개의 하부조직이 설치

10) エコノミスト 編輯部 編, 『戦後産業史への証言三』(東京: 毎日新聞社, 1978), p. 219.

11)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団体連合会三十年史』(東京: 経済団体連合会, 1978), p. 59.

됐다. 방위생산위원회 산하에는 심의실(審議室)을 두고 특수 발주 계획화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했다. 미·일경제협력간담회는 미국의 군수원조, 자위대의 방위력 정비, 미국과 일본 간 경제협력 업무를 수행했고, 방위생산위원회는 양국 정부에 일본 방산업체들의 의견을 집약해 전달하는 연락 기능을 수행했다.

당시 미일경제협력간담회는 일본 재계의 중량급 인사들이 망라했다. 나가사키 에이조(長崎英造) 회장(게이단렌 고문), 고바야시 아타루(小林中) 부회장(개발은행 총재), 우에무라 고고로(植村甲午郎) 부회장(게이단렌 상담역), 시마다 가쓰노스케(島田勝之助) 총합정책위원회 위원장(훗카이도탄광 회장), 사토 기이치로(佐藤喜一郎) 상임위원(제국은행 사장), 와타나베 기스케(渡邊義介) 상임위원(야하다제철 사장), 다마이 교스케(玉井喬介) 상임위원(미쓰비시중공업 회장), 모로이 간이치(諸井貫一) 상임위원(지치부시멘트 사장), 호리 분페이(堀文平) 상임위원(후지방적 회장) 등이 그들이다.¹²⁾

일본정부는 전후 처리에 급급한 상태였고, 방위생산에 관한 사무는 미일경제제휴간담회가 도맡아 처리했다. 1952년 8월 12일 고코 기요시(郷古潔)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이 초대 방위생산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고, 이후 방위생산위원회는 미국 측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일을 처리했다.¹³⁾ 방위생산위원회가 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다듬어 이를 총합정책위원회에 상정하면, 미일경제협력간담회 의견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시에 방위생산위원회는 게이단렌과 달리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한편, 회원 제도를 만들어 관계회사로부터 회비를 징수했다. 이처럼 운영자금을 자체 조달하기 때문에 방위생산위원회는 게이단렌에 속하지 않는

12) エコノミスト 編集部 編(1978), p. 219.

13) エコノミスト 編集部 編(1978), p. 221.

구성원들도 소속시킬 수 있었다. 게다가 게이단렌의 공식적인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정책들도 자유로이 발표하거나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¹⁴⁾ 방위생산위원회는 이런 요소 때문에 일본의 민간 방위청(Japan's private defense ministry)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방위생산위원회의 의장은 발족 이후 일본의 산업계에서 보스 격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회장이 도맡다시피 했다. 방위생산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당시 일본산업협의회 고문인 고코 기요시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이 역임했다. 심의실장은 우에무라 고고로 게이단렌 회장, 심의실 위원인 센가 데쓰야(千賀鐵也) 방위생산위원회 사무국장은 간사 역할을 맡고 있었다.

2. 무기수출3원칙의 성립과 방위생산위원회의 대응

1) 방위생산위원회의 탄생과 재계의 전후 처리 참여

1960년대 중반부터 무기수출 3원칙을 비롯한 비군사화규범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까지 일본이 독립국가로서 무기수출과 방위생산에 주력할 수 있었던 시기를 1945~1967년으로 규정하고, 이 시기를 '비군사화규범의 공백기'라고 부른다.¹⁵⁾ 탈냉전기의 일본 방위정책 수립 과정을 기술하기 전에 냉전 시기 게이단렌과 방위생산위원회가 일본의 방위산업 재건, 1·2·3차 방위력정비계획, 방위장비 국산화 노력, 수출시장 개척 등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1년 9월 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은 연합국의 점령으로부터 벗어나 명실상부한 독립국가로서 면모를 갖춰 가기 시작했

14) Richard J. Samuels, *Rich Nation, Strong Army: National Security and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Japan*(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p. 145.

15) 오동룡, 『일본의 비군사화규범 형성과 변천과정에서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의 영향력 연구』(국방대 박사학위논문, 2015), p. 56.

다. 일본은 1946년 제정한 평화헌법 제9조 2항에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패전 직후 제국주의 육·해군이 해체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점령정책에 따라 비군사화, 민주화 방향으로 나아갔다.

재계는 전후 방위산업 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전후 처리에서 일본의 비군사화가 결정된 상황에서 정치인들과 국가기구들이 강화와 독립에 몰두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방위산업과 방위정책에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었다. 국가기구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카지마 지쿠헤이(中島知久平) 상공대신은 재계와의 공동대응을 위해 재계 지도자들을 불러들였다. 그는 항복 서명 직후인 1945년 9월 3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전후 일본 경제의 수습책을 자문했다. 재계는 본능적으로 방위산업의 당면 문제를 실질적 통치자인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 생존을 모색할 기회를 잡았다.

이를 기회로 게이단렌을 중심으로 하는 방산기업들은 방위산업의 자력갱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재계 원로로 구성된 게이단렌 간부들은 정부기구, 특히 방위산업의 비대화를 우려한 대장성 관리들을 설득해 가며 미국의 점령정책 기간 동안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미국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결과적으로, 재계는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배상완화, 단독강화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1948년 7월 맥아더사령부가 점령정책을 전면 수정, 배상중지 후 재군비로 전환한 것은 재계가 전후 생존을 위해 경제단체연합위원회(게이단렌 전신)를 결성하고 4단체 통합으로 연합군사령부에 요망서를 제출해 전후 일본경제 부흥방안과 배상금 최소화에 노력한 결과였다.

이와 함께 재계는 1951년 1월 방위생산위원회의 전신인 미·일경제제휴간담회를 발족시켜 미국의 원조로서 자립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 이러한 재계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공산화와 미·소 냉전 격화, 그리고 6·25전쟁의 발발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미소냉전으로 국제정세가 소용돌이치자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1954년 자위대가 발족한다. 미국은 공산권의 보루로서 생각하던 중국 국민당 정권이 패퇴해 대만으로 물러나면서 그 역할을 일본에 떠맡겼던 것이다.

특히 6·25전쟁의 발발과 이에 따른 특수(特需)로 방위산업은 본격적인 재건의 시기를 맞는다. 1952년 연합군사령부의 무기제조 허가에 따라 처음으로 4.2인치 박격포를 수주한 일본 방산업계는 본격적으로 회생의 길에 접어들었다. 미국은 6·25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주일 미 군수사령부를 창설해 한반도 전구(戰區)의 병참을 맡겼고, 74억 엔을 투입해 일본의 방위산업체를 육성했다.

재계는 강화조약 체결까지도 간여했다. 재계는 정치적으로 전면강화보다 미국을 상대로 한 단독강화가 경제재건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단독강화를 희망했고, 이를 델레스 특사에게 요청했다. 재계는 델레스 특사에게 6·25전쟁 특수 이후 무기산업의 성장을 위한 요청을 ‘강화조약에 관한 기본요망’이라는 요청서에 담았다.

6·25전쟁 종전 후 미국은 MSA법¹⁶⁾을 제정해 우방국을 지원했다. 1953년 7월 일본정부는 MSA 대미교섭에 나섰고, 이케다-로버트슨 회담으로 본격적 재군비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군원(軍援)을 받을 수 있었다. MSA로 방위산업을 육성하려고 마음먹었던 재계는 대장성이 방위산업 비대화가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해 방위산업 예산 반영을 엄격하게 하자, 무기산업이 도산하는 등 좌절을 맞보았다. 그러나 방위생산위원회는 산하에 심의실을 설치하고, MSA를 겨냥한 최

16) 상호방위원조협정(MSA, Mutual Defense Assistance Agreement)은 1951년 10월 10일 성립한 미국의 자유진영 제국에 대한 원조법이다. 그 제정목적은 ① 자유세계의 상호안전보장과 개별적·집단적 방위의 강화, ② 우방국의 안전과 독립 또는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한 우방국의 자원개발, ③ 우호국이 쉽게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조직에 참가하여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으로, 주로 군사적 원조에 역점을 둔 것이었다.

초의 방위계획인 '3·3·3 플랜'을 작성하기도 했다.

1957년 5월 국방회의가 '국방의 기본방침'¹⁷⁾에 따라 MSA 원조로 방위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으로 1차방을 결정하자, 방위생산위원회는 방위력 정비계획 3년으로는 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예산상으로 제약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 전망으로 방위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1960년 1월 안보조약 개정으로 일본은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안보관계가 격상됐다. 이에 대해 재계는 안보조약 개정 과정에서 "일국의 안전은 경제적 보장도 포함해야 한다"며 경제조항 삽입을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재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아다치 다다시(足立正) 일본상공회의소장은 재계 대표로 워싱턴에서 열린 신안보조약 조인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1961년 2월 성립한 2차방은 안보조약 개정 후유증으로 반미의식이 고조되자 '케네디-라이샤워 노선'으로 불리는 대일 유회책이 펼쳐졌고, 이 와중에 일본정부는 방위 2법(방위청 설치법, 자위대법) 개정과 자위대의 증강계획을 2년 만에 통과시켰다. 이런 와중에도 방위생산위원회는 육·해·공 막료감부 책임자를 불러 2차방의 소요전력 파악작업을 실시했고, 정부에 단년도 예산편성에서 장기 5년 계획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2차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961년 5월 방위장비국산화간담회를 발족해 자민당 정조회를 중심으로 정부, 정당, 방산업체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정·관·재를 잇는 핵심조직으로, 초대회장은

17) 1957년 5월 20일 하토야마 내각이 국방회의에서 결정한 국방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국방의 목적은 직접 및 간접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침략을 받았을 때는 이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평화를 수호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국제연합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간의 협조를 도모하여 세계평화의 실현을 기한다, ②민생을 안정시키고 애국심을 고양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확립한다, ③국력(國力)과 국정(國情)에 응분하는 자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 ④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장차 국제연합이 유효적절하게 이를 저지하는 기능을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해 이에 대처한다.'

방위청장관과 중의원의장을 지낸 자민당 내 대표적 방위족 의원인 후나다 나카(船田中)가 맡아 재계의 대정부 로비창구를 담당했다.

방위생산위원회는 베트남전에 따른 제2의 특수를 기반으로 해외수출시장 개척에도 앞장섰다. 비록 규모는 작았으나 일본의 무기수출은 1967년 무기수출 3원칙 공표 이전까지 해외수출로 이어졌다. 그러나 해외수출은 미약한 방산기술로 인해 벽에 부딪혔고, 방위청은 1958년 수출증대를 위해 무기기술 연구개발 필요에 따라 '기술연구본부'를 설치했다. 이후에는 시장개척을 위해 1959년 '시장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1967년 3월 결정한 3차방은 베트남전 수렁에 빠져 있는 미국이 군사적·재정적 부담을 일본에 맡기는 구도였다. 방위생산위원회는 방위장비 국산화간담회 회장으로 정계 거물인 후나다 나카를 통해 의회와 정부를 연결하며 방위장비 국산화와 생존을 모색했다. 요킨대 전후 일본의 방위산업과 방위정책 전개는 냉전의 격화라는 국제상황의 변화에서 궁극적으로 가능했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상황적 변화를 잘 포착한 게이단렌방위생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의 발빠른 움직임이 시의적절 했다고 할 것이다.

2) 무기수출 3원칙의 결정 과정

1967년 4월 21일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는 중의원 결산위에서 비군사화규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사토 총리는 사회당 하나야마 지카요시(華山親義) 의원이 “도쿄대가 개발한 로켓을 인도네시아, 유고슬라비아에 수출하는 것과 관련, 무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수출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하자, “공산권 국가, 유엔결의에 의해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혹은 그 위험성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 일본에서 생산된 무기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토 총리의 발언은 외환법 제1조, 제47조, 제48조에

의거해 통상적으로 답변한 것이었으나, 이날의 발언은 정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굳어졌다.

이 같은 일련의 비군사화규범 공표에 의해 일본은 핵무기와 군사위성은 물론이고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탄,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들의 개발을 스스로 규제했고, 여타 재래식 무기들의 대외수출도 전반적으로 금지했다. 이로써 1960년대 후반까지 성장해 온 일본의 방위산업은 이러한 비군사화규범의 공표에 따라 기술적 잠재력이 제약당하고, 국제 무기시장에의 참여도 극력 제한을 받게 됐다.

무기수출 3원칙 표명 후 일본의 무기수출 실적은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¹⁸⁾ 각국으로부터 잠수함의 구입, 소총 제조 플랜트, 총탄 제조 플랜트 등의 상담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야당으로부터 또다시 무기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타났다. 야당의 방침을 수용한 일본정부는 무기수출 금지의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976년 2월 27일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총리는 중의원에 출석해 “3원칙 대상지역 이외에 대해서도 무기수출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무기제조 관련 설비의 수출에 대해서도 무기에 준해 취급하겠다”며 새로운 정책 방침을 밝혔다. 이 방침은 기존 무기수출 3원칙 대상지역에 대한 방산수출을 지속적으로 불허하는 동시에,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평화헌법 및 외환법(外換法)의 정신에 준해 무기수출을 금하고, 무기제조 관련 설비의 수출도 무기에 준해 취급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정부의 무기수출 금지에 대해서 재계의 즉각적인 반응은 알 수 없으나, 방위생산위원회 『특보』를 통해 나타나는 첫 언급은 1970년 1월 23일 5개 경제단체가 참석한 나카소네 방위청장관의 취임 축하연에서였다.

18) 1967년 미국으로 권총을 중심으로 7,700만 엔, 1968년에도 미국대상의 수출액이 5,900만 엔이었으나, 1969년도 407만 엔, 1970년도 169만 엔으로 대폭 감소했다. 桜川明巧, 「日本の武器輸出政策－武器輸出三原則の国会論議をめぐって－」, 『國際政治』 第108号, p. 86.

이 자리에서 후나다 나가 방위장비국산화간담회 회장은 “방위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조치와 충분한 시장이 필요하다”며 “소화기(小火器)는 공격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격무기로 간주해 한국이나 대만, 그리고 베트남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방위생산위원회는 1982년 5월 미 하원외교위원회 보고서를 『방위생산위원회 특보』에 소개하면서 수출용 무기 생산능력, 해외 방산업체에서 무기기밀 정보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무기수출 3원칙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역대 방위청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무기수출 3원칙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1967년에 이어 1976년 한층 더 강화된 무기수출 3원칙은 게이단렌과 방위생산위원회로 대표되는 방산업체들에 커다란 제약이었다. 그러나 방산업계는 이에 굴하지 않고 국산화를 통해 기술력을 높이는 한편, 게이단렌을 통해 통산성과 의회, 그리고 방위산업 재건에 관심을 가진 보수인사들의 인맥을 적극 활용해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했다. 방위생산위원회는 2014년 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를 통해 무기수출 3원칙 개정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기까지 46년간 이 규범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Ⅲ. 나카소네 방위청장관 취임과 방위생산위원회와의 협력

1. 나카소네 구상과 4차방의 논의

1970년 1월 사토 내각에서 자주방위 구상을 표명한 나카소네 야스히로라는 거물 정치인이 방위청장관에 취임해 자주방위 5원칙, 국방의 기본

방침의 재검토를 천명했다. 이때 사토 총리는 미·일안보조약의 자동연기를 위해 오키나와 반환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했다. 1970년 11월 나카소네 방위청장관은 처음으로 『방위백서』를 작성해 재군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사토 총리는 사토-존슨 회담에서 베트남전 지지와 군사력증강 약속을 대가로 오가사와라 반환과 오키나와 반환을 의제로 채택했다. 당시 미국의 무상원조는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고, 베트남전으로 인한 미국 군사기술의 유입으로 일본의 방위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방산업계는 군비증강론자인 나카소네가 방위청장관으로 부임하자 원군을 만난 듯 업계의 활로를 찾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방위생산위원회는 1970년 1월 취임한 나카소네 장관을 8월 12일 계이단렌으로 초청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 학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방위심의회’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관민 합동으로 구성되는 상설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를 주장했다. 재계가 정부 측에 비공식적 압력을 가하거나 요구해 온 사안들을 협의기구를 통해 공식화하려는 시도였다.

4차방을 책임진 나카소네의 방위청장관 취임은 스스로 지원한 것으로¹⁹⁾, 그가 예전부터 주장해 온 자주방위론, 소위 나카소네구상(中曾根構想)을 제시하며 실현시키고자 했다. 나카소네 구상은 3차방 이후의 장기방위력정비계획으로 1971년 4월 정리한 장기계획인 신방위력정비계획(방위청 원안)을 말한다. 나카소네 구상의 골간을 이루는 그의 ‘자주방위 5원칙’은 핵무기나 공격형 무기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아시아의

19) 나카소네는 재임 중 적극적으로 자위대원들 속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유명했다. 나카소네가 재임 중 업적 가운데 민간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위대를 진단하는 모임(自衛隊を診断する会)’을 만드는 등 후임들에게 모범이 됐다. 中曾根康弘, 『天地有情-五十年の戦後政治を語る』(東京: 文芸春秋, 1996), pp. 249-250.

안정을 위해서라도 미·일 안보는 반영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재계의 환영을 받았다.

1970년 게이단렌 회장에 취임한 도시바의 도고 도시오(土光敏夫)는 연례총회에서 “일본이 자주국방 능력을 늘려 아시아 집단안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방위생산위원회는 향후 방위연구개발과 생산 분야에 대한 자본투자 확대방침을 표명했고, 나아가 경제단체들은 대장성 등에 대해 자주방위를 위한 예산증액과 헌법 제9조 폐기 등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²⁰⁾

나카소네는 취임 직후인 1970년 1월 23일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 등 방위산업 관련 5개 단체가 게이단렌회관에서 주최한 취임 축하연에서 “국방의 문제는 정치가들이 정면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방위청의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오카노 야스지로(岡野保次郎) 방위생산위원회 위원장(미쓰비시중공업 사장)은 나카소네 신임장관에게 방산업계의 현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관련 공업협회가 협력해 방위장비의 연구개발 실태를 조사해 보니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3차방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지금, 충분한 방위력을 보유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쇼와 47년(1972년) 시작하는 4차방은 이른바 ‘롤링 방식’²¹⁾에 따른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방위장비의 양산과 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5년 정도에 걸친 명확한 방위구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방산업체들도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²²⁾

20) Michael J. Green, op. cit., p. 57.

21) 중장기 경제·재정 계획에서 계획기간은 같은 햇수를 유지하되, 당해 연도를 계획의 실시 기준연도로 잡고, 과년도(過年度)와 대비하여 연도마다 계획에 수정을 가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의 일본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한국의 국방 중기계획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계 원로인 후나다 나카 방위장비국산화간담회 회장(방위청장관 역임)도 나카소네 신임 장관에게 무기수출 3원칙 성립 이후 무기수출 문제에 대해 재계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전달했다.

“오카노 방위생산위원회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방위장비는 빌려 쓸 수 없으므로 국산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서독 등 선진국들은 장비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스스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즉 장비의 개발과 생산은 정신력만으로는 곤란한 것이다.”²³⁾

나카소네 방위청장관은 신임 방위청장관으로서의 포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방위청장관이란 대임(大任)을 스스로 자원해서 맡게 됐다. 방위문제는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전에 지토세(千歳)의 북부방면대 7사단에 근무하는 젊은 자위관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자위관들은 20명을 수용하는 내무반의 다단식 침상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자비로 텔레비전을 구입했고, 손난로(懷爐)를 3개씩 개인적으로 마련해야 했다. 총기를 손질할 때 사용하는 면포(綿布)와 화장지까지도 개인적으로 사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우리나라의 방위가 어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모르겠다. 국방의 문제는 본래 정치인들이 정면에서 당당하게 논의해야만 하는 성질의 것이다. 이것이 지금 정치인에게 부과된 최대의 과제인 것이다. 국가 존립의 기본 문제인 국방을 어둠속에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²⁴⁾

22) 防衛生産委員会, 「中曾根防衛庁 長官就任祝賀ならびに防衛庁 首脳と懇親パ-テイ: 防衛産業関連5団体共催」,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122号(1970.3), pp. 1-8.

23) 防衛生産委員会, 「中曾根防衛庁 長官就任祝賀ならびに防衛庁首脳と懇親パ-テイ: 防衛産業関連5団体共催」,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122号(1970.3), pp. 1-8.

나카소네는 “국민의 국방의식과 방위산업은 스케이터와 스케이트 링 크와의 관계와 같아서 만약 스케이트 링크(국방의식과 방위산업)가 없다면 아무리 우수한 스케이터(정예 자위대원)도 진가를 발휘할 수 없다”면서 “방위장비의 연구개발은 방위청 혼자 힘의 힘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 정밀한 계획, 효율적 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방위생산위원회는 8월 1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차기 방위력 정비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²⁵⁾를 발표했고, 앞서 방위청이 발표한 ‘장비생산 및 개발에 관한 기본방침’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상설 대화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나카소네 장관은 흔쾌히 응했고, 방위청 장비국장과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 사무국장이 매월 한 차례 모여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²⁶⁾ 간담회는 필요시 방위청 관계자, 기타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의 대표자, 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 관련단체 연락회의’를 설치해 센가 데쓰야 방위생산위원회 사무국장, 쓰치야 마사오(土屋正雄) 전자기계공업회 전무 등을 멤버로 구성했다.

나카소네 장관은 1970년 9월 방위생산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방

24) 방위생산위원회, 「中曾根防衛庁 長官就任祝賀ならびに防衛庁 首脳と懇親パーティ: 防衛産業関連5団体共催」,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122号(1970.3), pp. 1~8.

25) 방위생산위원회는 1970년 8월 12일 ‘차기 방위력 정비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했고, 동시에 나카소네 장관을 초청해 ‘견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견해는 ①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립 ②새로운 정세변화에 부응해 합리적 계획 입안을 위한 방위심의회 설립 ③장비의 생산 및 개발에 관한 기본방침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관민합동의 상설적 회합의 장을 마련할 것 등이었다. 3가지 제안에 대해 나카소네 장관은 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실현에 노력하겠다 ②에 대해서는 현재의 각종 심의회가 자칫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 ③에 대해서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했다. 파티가 끝나고 나카소네 장관은 동석한 방위청 간부에게 상설대화기구 설치를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③의 상설적 대화기구 설치에 관해 방위청과 방위생산위원회 사이에 구체적 검토가 진행됐다고 한다. 방위생산위원회, 「次期防衛力整備問題にかんするわれわれの見解」, 『防衛生産委員会 特報』, 第125号(1970.8), pp. 1~6.

26) 방위생산위원회, 「防衛庁との常設懇談会設置なる」, 『防衛生産委員会 特報』, 第126号(1970.9), p. 1.

위청과 방위생산위원회 사이의 상설간담회를 설치했다. 재계는 그동안 정부 측에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 요구사항들을 전달했으나, 본격적으로 협의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방위생산위원회는 제도적으로 방위산업 정책결정 과정에 깊숙이 간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위생산위원회는 1971년 5월 31일 나카소네 장관을 초청해 방위청 원안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나카소네 장관은 방위생산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4차방을 장기계획으로 입안해 주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방회의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정부 내 주요 반대세력인 대장성의 간섭을 배제하는 등 타 부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1970년 9월 나카소네 방위청장관은 미국을 방문하는 도중 총액 160억 달러(5조7,600억 엔)의 4차방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발표 방법뿐 아니라 그 액수의 규모로 주목을 받았다. 나카소네 장관은 귀국 후인 10월에 총액 5조8,000억 엔에 이르는 4차방 개요(시안)를 발표했다.²⁷⁾

이는 3차방의 2.2배에 달하고, 당시 세계 12위였던 방위비 총액이 세계 6위로 올라서는 수치였다.

그러나 자주방위를 강조하며 ‘국방의 기본방침(유엔 중심, 기반의 형성, 방위력 집중, 안보기조 등 4개 항목)’을 개정하려 했던 나카소네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사토 총리와 당내 비둘기파 의원들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 사토 총리는 자민당 내 미·일 안보 지지파의 중심인 물이자 방위족 의원의 대표격인 후나다 나카 중의원 의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1971년은 달러 쇼크에 의한 일본 경제의 대변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71년 7월 닉슨의 중국 방문 결정, 그리고 자위대의 F-86 전투기와 전일공(全日空) 항공기의 공중추돌 사건과 같은 대형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마스하라 게이키치(増原恵吉) 방위청장관이 사임했다. 후임인 니시

27) 「規模, 年間一兆円越す」, 『朝日新聞』, 1970. 10. 22.

무라 나오미(西村直己) 장관도 중국의 유엔가입에 대해 “유엔은 시골의 신용조합”이란 발언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아 사임했다. 이 때문에 1971년 한 해 동안 나카소네 야스히로, 마스하라 게이기치, 니시무라 나오미, 에자키 마사미(江崎眞澄)에 이르기까지 방위청장관 4명이 줄줄이 낙마했다.

방위산업의 외연 확장과 함께 3차방이 1971년 끝나게 되자, 방위청은 1972년부터 4차방을 검토하고 있었다. 방위생산위원회는 견해를 통해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은 첫째로 국민적 합의 및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둘째로 국가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이 라는 관점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²⁸⁾

이 과정에서 방위생산위원회는 ‘장비의 국산화’와 ‘방위생산의 확대’를 위해 방위청에 끊임없는 압력을 가했다. 장비 국산화의 경우 방위생산위원회가 이전부터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지만, 4차방에서는 기술력 확보를 토대로 노골적으로 국산화 요구를 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71년 6월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고노 후미히코(河野文彦) 미쓰비시중공업 회장은 취임 담화에서 “장비의 국산화는 수입보다 비쌀지 모르지만, 긴 안목에서 국산화를 해야 한다”면서 “무기생산을 외국에 맡겨 두면 외교관계에서 과감해질 수 없다”고 했다.²⁹⁾

요컨대 4차방 계획은 일·중 국교수립에 따른 아시아지역의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주변국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방위생산위원회는 나카소네 장관과의 협력으로 4차방의 최종안이 최초안이었던 나카소네 원안보다 축소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관철시켰다. 뿐만 아니라 4차방 말기에 이뤄졌던 주요 장비들은 거의 모두 국내개발로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총액 4조6,300억 엔으로 결정된 4차방에 대해 센가 데쓰야 방위

28) 日本經濟団体連合会, 『經濟団体連合会三十年史』(東京: 經濟団体連合会, 1978), p. 544.

29) 『裝備國産化促進を』, 『日本經濟新聞』, 1971. 6. 30.

생산위원회 사무국장은 “방위비 규모는 GNP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보장비 등과 균형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 정도의 방위비 규모라면 국민적 합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마키 게이조(玉置敬三) 일본병기공업협회장(도시바 사장)은 “이제까지의 추세로 보아 전체적인 틀은 타당하다”면서 “일본 방위산업의 국산화의 방향이 정립됐다”고 논평했다.³⁰⁾ 방산업계로서는 4차방이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것이었음에 틀림없었던 것이다.

2. 구보구상과 방위계획대강의 발표

다나카 내각은 4차방이 제동장치가 없는 준비확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평화시의 방위력의 한계’에 관해 제동장치 마련을 위해 방위청에 대해 그 검토를 지시했고, 그것이 바로 구보구상(久保構想)이었다.³¹⁾ 방위청 방위정책국장이었던 구보 다쿠야(久保卓也)는 1971년 3월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기본적 방위력’ 개념을 제시했다.

구보는 “일본이 건설해야 할 방위력은 적대세력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근린국가들의 정치적 의도에 기반해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²⁾ 이는 명백히 나카소네가 추진하던 자주국방론에 입각한 군사력 건설론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다. 구보는 1970년대 일본의 방위력 정비라는 문제를 이론화·체계화한 인물이다. 구보의 주장은 방위국장 시대에 그가 각종 논문(이른바 KB논문)의 형태로 발표했고,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방위력 정비를 둘러싼 논의는 1972년 장기 방위력 정비계획

30) 「目玉通って好感」, 『朝日新聞』, 1972. 10. 9.

31) 藤原彰, 『日本軍事史(下卷) 戦後編』(東京: 社会批評社, 2007), pp. 186~187.

32) 田中明彦, 『安全保障: 戦後50年の摸索』(東京: 読売新聞社, 1997), p. 246.

인 4차방이 결정되고, 또 1974년 외국(外局)인 방위시설청장관으로 구보가 취임하면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으나, 이듬해 다시 사무차관으로 방위청에 복귀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기반적 방위력 개념이 방위정책 책정에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을 것을 기대한 사카다 미치다(坂田道太) 방위청장관까지 가세하면서 1976년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핵심으로 채택한 ‘방위계획의 대강’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미소의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구보 다쿠야의 긴장완화를 전제로 한 방위계획의 대강 노선은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구보 다쿠야는 방위청 사무차관이던 1975년 9월 30일, 방위생산위원회를 찾아 자신의 ‘신안보구상’을 밝혔다. 미국과 최근의 아시아 정세, 한반도 문제, 일본의 방위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으나, 일본의 방위문제에 대한 언급만을 소개한다.

“제임스 슬레진저(James Schlesinger) 장관은 ‘일본 군사력은 규모가 작아도 괜찮으나, 현재의 군사력은 불충분해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can be small but should be high quality)’라고 말했다. 그 논거는 미·중 접근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전개되는 가운데 일본의 방위비가 크게 증가하면, 주변국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은 국제정치와 관련해 방위력의 본연의 모습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방위력 형태가 타당할 것이다. 군사력이 커지면 주변국이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우려해 결국 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군사력이 작으면 일본이 방위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비판이 높아져 일·미안보조약의 신뢰를 약하게 할 것이다.”³³⁾

33) 구보 다쿠야 사무차관은 1975년 9월 30일 게이단렌에서 강연회를 갖고, 8월말 슬레진저 미 국방장관, 레이더 전 국방장관이 방일해 아시아 정세에 대해 의견 교환을 나눈 사실을 전했다. 그는 일본을 둘러싼 최근의 방위문제에 대해, “슬레진저 장관은 방위를 둘러싼 일본 헌법상의 문제, 국제정세 등에 대해 충분한 이

1976년 5월 24일 방위생산위원회는 구보 다쿠야의 기반적 방위력에 대한 반박 견해를 내놓았다. 방산업체 입장에서 기반적 방위력 건설에 필요한 것을 적시했고, 특히 무기수출 3원칙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방위청은 차기 방위력 정비계획 책정에서 기반적 방위력의 정비를 하나의 주요한 지주로서 제시했다. 우리가 기반적 방위력 문제를 고찰할 때 지적하려 하는 점은 첫째, 상비 방위력의 구성 및 그 본연의 모습에만 머물지 않고 역사적 배경, 헌법상의 문제 등 일본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방위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유지보급 능력을 포함해 방위 생산력을 기반적 방위력 형성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확인하는 것이다. 구미 각국은 무기 수출을 포함해 방위생산력 형성에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4차방 계획 경과로 미뤄 볼 때 방위생산의 기반생산력 인식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일본의 방위생산력의 유지·육성은 민간기업의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정부 시책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방위생산력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예산편성, 장비획득, 연구개발, 후방지원 등 일련의 기반적 방위력의 문제에 관해 우리가 절실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³⁴⁾

해를 하고 있었고, 발언도 신중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슬레진저 장관은 매우 친일적인 사람으로 패전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베트남전 이후 일본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등에 대해 솔직하게 알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미국에 상당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미국의 힘의 정책은 슬레진저 장관에게 이어지고 있듯 오늘날 세계의 데탕트는 미국의 힘, 동맹국의 결속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防衛生産委員会, 「安全保障問題について講演会開催-防衛庁久保事務次官講演要旨」,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151号(1975.11), pp. 11~21.

34) 防衛生産委員会, 「防衛力整備問題に関するわれわれの見解(提言)」,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155号(1976.8), pp. 14~21.

방위 관료인 구보 다쿠야와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방위생산위원회는 방위력 정비계획과 무기수출 문제를 놓고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구보 다쿠야의 이른바 ‘구보 구상’은 주변국 군사력에 대응해 소요방위력을 갖춰야 한다는 발상을 바꿔 평시의 상한을 정하자는 것이었다. 베트남 패망과 전 세계적 불황, 그리고 미·일동맹의 강화로 일본 내에서는 방위비 지출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고, 결국 방위청 내부에 구보와 같은 관리가 나타나 5년간의 장기 방위계획을 단년도 방위계획으로 바꿔 방위비 증강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취지였다.

결국 구보 구상은 1976년 방위계획대강으로 결실을 보았고, 방위청을 향한 끝없는 재계의 요구는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비군사화규범이 양산되던 시기에 재계의 활동이 관료계를 움직이지 못하고 시대적 상황에 막혀 좌절된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4차방까지의 방위정책이 양적 성장에 입각한 고정적인 5개년 계획으로 성과를 거뒀다면, 방위청은 기반적 방위력을 토대로 ‘양적 확대’에서 ‘질적 충실’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평가와 재검토가 불가피한 요건이 된 것이다. 방산업체들에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절이 도래한 것이다.

1980년부터 1984년 사이에 53중기 업무견적(이하 53중업)과 56중기 업무견적(이하 56중업: 1983~1987년도의 방위력 정비계획)이라는 방위청 자체의 5개년 방위계획이 수립됐다. 4차방 이후 평시 방위력의 상한선을 정한 방위계획대강이 있을 뿐이고, 이후에는 매 년도에 예산이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다시 말해, 각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방위청 자체의 계획이 수립되던 시기였다.

이에 앞서 1977년 8월 8일 하라 도오루 방위청 방위국장은 “방위생산 기반유지 관점에서 5년간의 방위력 정비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재계의 의견이 강력해 방위청에서 이를 검토하게 됐다”면서 “방위청도 방위청

전체의 중기적 전망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1977년부터 중기업무견적 책정작업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표명했다.

1979년 1월 19일 방위생산위원회는 아마시타 겐리 방위청장관을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초청해 중기업무견적이 결정되기 직전 방산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³⁵⁾ 아마시타 장관은 “1979년 정부예산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방위예산을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연구개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모리야 가쿠지(守屋學治) 일본항공우주공업회 부회장(미쓰비시중공업 회장)은 “항공기는 무기로 사용하면서 발달해 왔고, 그런 의미에서 방위산업은 항공기의 기술적·산업적 발달의 기반”이라면서 “일본 항공기공업의 방위조달 의존도는 오늘날 약 90%에 달할 만큼 방위조달이 항공기공업의 사활을 좌우한다”고 했다. 이어 “1978년 F-15, P-3C 조달결정으로 침체된 방위수요가 겨우 회복추세에 있으나, 방위수요는 연간 2,000억 엔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F-15, P-3C 등 라이선스 생산하는 장비에 대해 국산화율의 향상, 리스크를 감안한 적절한 장비품 가격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1979년 7월 17일 방위청은 1980년도부터 1984년도까지 5개년 간 방위력 정비계획에 해당하는 53 중기업무견적을 결정했다. 198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강한 미국 부활, 대소 강경론을 주창한 공화당의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 레이건은 1981년 10월 ‘미 핵전력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비확충을 서두른 방위청은 내부에서 53중업 자체의 재검토 필요론이 일어났다. 53중업의 재검토 작업은 이미 1980년 4월부터 착수됐지만, 1981년 4월 국방회의에서 방위청이 56중업 작성 작업을 개시할 것을 인정했다. 이 기회에 방위계획의 대강에

35) 防衛生産委員会, 「防衛庁 首脳との懇談会を開催」,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172号 (1979.2), pp. 1-2.

서 정한 방위력 수준의 달성을 기본방침으로 할 것을 양해했다. 즉 1987년도까지 대강이 정한 방위력의 상한을 달성한다는, 기한을 정한 기본방침을 승인했던 것이다.³⁶⁾

53중업 도중에 이를 수정해 56중업 책정을 개시한 것뿐만이 아니다. 방위력의 상한을 결정한 방위계획의 대강 자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방위생산위원회는 이 시기 무기수출 3원칙을 비롯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원칙, 비핵 3원칙, 방위비 GNP 1% 이내의 원칙이라는 재계로서는 최고의 악재인 비군사화규범의 탄생을 줄줄이 겪으면서도 특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켜 나가고 있었다.

IV. 탈냉전기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의 활동

1. 나카소네 내각 출범과 미·일 안보협력 강화

1982년 11월 총리에 취임한 나카소네는 이듬해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 그때 나카소네는 “양국은 공동운명체”라며 “국정상황에 따라 일본의 책임을 종래 이상으로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³⁷⁾ 회담 중인 1월 18일 나카소네 총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이른바 일본열도 불침항모 발언을 했다. 일본열도를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보아 F-15 등의 강력한 전투기를 배치해 백파이어 폭격기에 대항하고, 소련의 잠수함과 함정에 대해 쓰시마(對馬島), 쓰가루(津輕), 소야(宗谷)의 세 해협을 봉쇄하

36) 防衛生産委員会, 「56中業に関する説明会を開催」,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195号 (1982.9), pp. 1~3.

37) 田中明彦, 『安全保障戦後50年の摸索』(東京: 読売新聞社, 1997), pp. 297~298.

고, 도쿄-괘, 오사카-대만해협의 씨레인을 방위한다는 것 등 모두 종래 일본정부가 취해온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방위의 기본적 입장인 국방의 기본방침도, 방위계획의 대강도 일단 전수방위의 입장을 취해 공격적·적극적 준비는 갖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나카소네 발언의 세 가지 목표 모두 이 범위를 벗어나 미국의 대소전략에 적극 협력하고, 종래의 방침을 크게 전환시킨 발언이었던 것이다.³⁸⁾

불침항모 발언이 국내외로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나카소네 총리는 귀국 직후인 1983년 1월 24일 제98차 통상국회 본회의에서 또 다시 충격적 발언을 했다. 나카소네는 “본인은 일본이 전후사의 전환점에 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종래의 기본적 제약과 구조에 관해 터부시하지 말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을 포함해 전후사의 기본적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후 총결산론’을 주창했던 것이다.

종래 노선의 재검토, 총결산 노선은 방위문제에도 분명히 나타났다. 방미에 앞선 1983년 1월 14일 고토다 마사하루(後藤田正晴) 관방장관의 담화로 종래의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하고,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 공여를 해금할 것을 발표했다.

레이건-나카소네 정상회담은 “불침항모” “4개 해협 봉쇄”라고 표현한 것처럼, 전수방위를 뛰어넘어 끈끈한 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조한 것이었다. 일본의 방위정책을 미·일 가이드라인 노선에 근거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 결정적이다. 1983년 3월 미·일방위협력소위원회에서 씨레인 방위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항공자위대(1984년) 또는 해상자위대(1985년) 통합지휘소훈련도 실시했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미 공군 F-16 전투기를 배치했다.

56중업에 이허 59중기업무견적(이하 59중업)의 시행으로 방위비의

38) 藤原彰, 『日本軍事史(下卷) 戦後編』(東京: 社会批評社, 2007), p. 255.

GNP 1% 이내의 범위를 넘어섰다. 방위생산위원회는 1984년 9월 14일 방위청 야마다(山田) 방위국장을 초청해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방위청의 대응에 대해 설명을 청취했다.³⁹⁾ 방위생산위원회는 1985년 4월 12일 '59중업에 대한 요망'을 발표해 방위청과 정부, 그리고 자민당 등 관계요로에 59중업에 장비조달의 안정화, 평준화, 가격의 적정화를 주문했다. 59중업이 방산업계의 중장기 개발, 생산전망을 좌우하기 때문이었다.

방위생산위원회는 59중업 책정 분위기가 무르익자, 1985년 4월 12일 '59중업에 대한 요망'⁴⁰⁾을 발표해 방위청과 정부, 그리고 자민당 등 관계방면에 방산업체의 입장을 건의했다. 방위생산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에는 59중업이 방산업계의 중장기 개발, 생산전망을 좌우하는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방위생산 능력이 방위력 정비의 중요한 일환이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정부는 일본 방산업계의 특질을 배려해 장비조달의 안정화·평준화, 가격의 적정화를 꾀하는 방위생산 기반강화와 충실을 주문했다.⁴¹⁾

1985년 9월 18일 국방회의와 각의는 1986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5년간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실질적 명칭은 59중기업무견적이다. 방위청의 내부계획을 권위 있는 정부계획으로 격상시킨 것이다.⁴²⁾

9월 18일 결정한 59중업은 1976년 미키 내각이 상한으로 정한 방위계획의 대강 수준을 기간 내 양적·질적으로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

39) 防衛生産委員会, 「昭和60年度防衛生産委員会総会ならびに記念パーティを開催」,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210号(1985.6), p. 4.

40) 방위생산위원회의 59중업은 정부 전체가 책임감 있게 장비의 개발 생산에서 구체적 지침을 동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연구개발의 추진, 국산화의 추진, 후방 관계의 충실, 후년도 부담의 세출적정화 등을 주장했다. 防衛生産委員会, “59中業に対する要望,”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217号(1985.6), pp. 18~19.

41) 防衛生産委員会, 「経団連・防衛生産委員会昭和60年度事業報告」,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217号(1986.7), pp. 3~4.

42) 防衛生産委員会, 「『中期防衛力整備計画』に関する説明会を開催」,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215号(1986.3), pp. 66~68.

다. 국제통화의 변동에 대응해 3년 후 재검토한다는 방식을 취했다. 59중업 결정은 실질적으로 4차방까지의 정비계획과 동일한 계획방식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카소네 내각은 단년도 방식을 전제로 한 방위계획대강의 방식을 사실상 폐기했다.

나카소네 내각은 1987년 방위비 예산 처리를 위해 1986년 12월 30일 안전보장회의와 각의를 열어 “1% 범위에 대신해 새로운 제도기준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공식적으로 10년간 지켜 온 원칙을 철폐한 것이다. 역대 정부가 내세웠던 전수방위도 1985년 9월 18일 발표된 59중업(신중기방)을 계기로 철폐했다.

59중업은 1976년 미키 내각이 상한선으로 정한 방위계획의 대강의 수준을 양적·질적으로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면서 신형 요격전투기 F-15 187대, 조기경계기 E-2C, P-3C 100여 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역대 정부가 내세웠던 전수방위라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2. 안전보장회의 설치와 미·일 방산협력의 요구

나카소네는 국가기구 개편의 일환으로 총리의 권한강화를 위해 내각관방(內閣官房·Cabinet Secretariat)의 확충을 도모했다. 1986년 7월 10일 내각심의실을 내정과 외교의 양대 심의실로 분리해 총리 직속 보좌기능으로 삼았다. 안전보장회의 설치 건은 재계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카소네 당시 방위청장관에게 꾸준히 건의했던 사항이다.⁴³⁾ 군사면, 비군사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보장을 담당할 기관의 필요성 때문에 1980년 12월 스즈키 총리는 당시 내각에 종합적인 안전보장 관계 각료회의를 설치했다. 그러나 각료회의는 그다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다.

43) 防衛生産委員会, 「昭和60年度防衛生産委員会総会ならびに記念パーティを開催」, 『防衛生産委員会特報』第210号(1985.6). pp. 8-9.

따라서 나카소네 내각은 보다 효과적인 종합기구를 만들어 안전보장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안전보장회의법(1986년 7월 10일 시행)을 제104차 통상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방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안전보장회의⁴⁴⁾를 설치하는 한편, 국방회의 사무국 대신 내각에 안전보장실을 둔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국방회의 사무국을 폐지하고, 새로운 내각관방에 설치한 안전보장실로 이를 대체했다. 총리, 내각관방의 발언권이 강화된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는 일본이 경제적 전성기를 구가하며 방위산업의 기술력 축적을 바탕으로 기술 수혜국(受惠國)에서 기술 공여국(供與國)으로 전환하던 시기다.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을 근거로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내세우며 미·일 무기공동생산을 막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1982년 3월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나카소네 총리를 방문해 일본 군사기술의 대미 이전을 재차 요구했다. 결국 재계와 미국의 무기수출 3원칙 폐지의 강한 요구에 대해 1983년 1월 나카소네 총리는 미국을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지역으로 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고토다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무기수출 3원칙 가운데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 공여를 해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고토다 관방장관 담화의 주된 내용은, 미국으로 무기기술을 공여하며, 이 공여는 무기수출 3원칙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⁴⁵⁾

1983년 1월 일본정부는 ‘미·일 방위조약 3조’에 의거,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조치로 대미 무기기술 제공협정을 체결해, 그해 11월 맨스필드 주일대사와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외무상이 미·일 교환공문을 교환하

44) 안전보장회의는 총리를 비롯해 내각법 제9조에 지정한 국무대신(부총리), 외상, 대장상, 내각관방장관,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방위청장관, 경제기획청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서는 ▷국방의 기본방침 ▷방위계획의 대강 ▷방위계획의 대강 계획에 관한 사업 등 조정 계획의 대강 ▷방위출동의 가부(可否) ▷내각 총리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안전보장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45) 朝雲新聞社 編輯局, 『防衛ハンドブック』(東京: 朝雲新聞社, 2002), p. 720.

고, 1984년 11월 양국 간 무기기술공동위원회(JMTC)를 발족했다.

1985년 12월에는 대미 무기기술 공여를 실시하기 위한 세목을 결정했다. 1986년 9월 방위청 기술연구본부가 연구해 왔던 '휴대형 SAM(지대공유도탄) 관련 기술'을 비롯해 대미 기술공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군사기술은 주로 민·군 겸용기술에 기반한 것이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 방위청이 기술이전을 민간기업에 강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정부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자,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1990년 발족한 반관반민 형태의 미·일 기술포럼이다. 기존에 존재했던 방위산업 협의의 장이 주로 정부주도인데 반해 미·일 기술포럼은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20회가 넘는 회합을 하면서 양국 간 기술이전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일본 방산기업들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미국과 12건 이상의 공동연구와 공동개발을 수행했다. 일본 최대 방산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참여가 가장 활발했고, IHI, NEC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공동연구와 개발을 추진했다. 2006년에는 말라카해협 등지에서 빈발하던 테러와 해적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순시함을 무상공여하는 형태로 수출한 적이 있다.

1986년 9월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레이건 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에 일본정부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재계였다. 물리학자, 수학자 등이 평화헌법,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비핵 3원칙, 무기수출 3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발했으나, 일본정부는 1985년 9월 1986년 1월, 관계 기관과 민간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나카소네 총리는 1986년 9월 9일 SDI 참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방위생산위원회는 처음에 생산을 주저했으나, 기술향상에 뒤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첨단기술 습득의 기회, 기초연구, 평화목적이라는 이유를 달아 정부의 참가결정을 지지했다.

방위생산위원회는 1986년 10월 20일 방위생산위원회 총회에서 'SDI 연구계획 참가에 관한 당면 요망'이 담긴 의견서를 내면서, "정부의 SDI 연구계획에 정식으로 참가하는 것은 일·미관계의 긴밀화, 서방진영의 결속강화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면서 "SDI 계획 참가가 첨단기술을 습득할 절호의 기회로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기술개발은 민생분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영국과 서독 등과는 다른 여건에 처해 있다"며 "산업계는 SDI 연구의 틀을 짜는 과정에서 일·미 정부 간 협의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⁴⁶⁾

3. F-2 전투기 미·일 공동생산

미·일 양국 간 기술 이전의 하이라이트가 된 사건은 FS-X⁴⁷⁾ 전투기의 공동개발이다. 1987년 나카소네 내각이 미국 레이건 행정부와 대미 무기기술 공여 결정에 기초해 합의한 차기 지원전투기 FS-X 개발계획은 일본 방위산업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동시에 무기수출 3원칙이라는 비군사화규범이 붕괴하는 단초가 된 사건이다. 1988년 10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측이 국산 지원전투기 F-1의 후계기를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 양국이 F-16 전투기를 모델로 공동개발에 착수한

46) 방위생산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①참가기업이 적절한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참가기업 보유의 독자 기술·노하우·정보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③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미국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참가기업이 보유하는 독자의 기술·노하우·정보 등에 관해서는 비밀지정의 범위 밖으로 할 것 ④참가기업의 취급이 미국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을 것 ⑤정부는 기업참가의 계약 전 단계에 대해 필요·충분한 지원 활동을 가능하도록 체제를 정비할 것 등을 요망했다. 방위생산위원회, 「昭和62年度防衛生産委員会総会ならびに同記念パーティを開催-SDI 研究計画への参加に関する当面の要望について」,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221号 (1987.7), pp. 8-9.

47) 일본의 FS-X 미·일 공동개발은 항공자위대가 가진 F-1 후계기로 F-16C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항공기를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다는 합의를 했다.⁴⁸⁾

당초 일본은 F-1의 후속기인 차기전투기를 엔진을 제외하고는 국산으로 개발하고 싶다는 의향이 강했다.⁴⁹⁾ 제로센 전투기를 개발한 호리코시 지로(堀越二郎) 등 전전 항공기 개발을 주도했던 기술자들이 전후 항공기산업 재건에 따라 미츠비시, 가와사키, 후지중공업 등에서 자리를 잡았다. 또한 구 해군의 기술사관이 항공자위대와 기술연구본부에 들어가는 등 FS-X 국내생산을 위한 인재풀도 어느 정도 조성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당초 대일 무역적자를 감안해 F-16이나 F-18 전투기를 직구매하라는 압력을 가해 왔다.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안보문제에 통상 문제를 결부시켜 재조정이라는 형식으로 FS-X 개발계획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차기 지원전투기 국내개발을 위한 방위생산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전개했다. 첫째, 전후 몇 가지 전투기 개발을 통해 보존해 온 항공 관련 산업의 인력과 기술력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점, 둘째, 차기 지원전투기가 일본의 국내기술력으로 충분히 생산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F-18이나 F-16 전투기 가격이 고가라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방위생산위원회는 국산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FS-X 개발 기자회견에서 가나모리 마사오(金森政雄) 게이단련 부회장 겸 방위생산위원회 위원장(미쓰비시중공업 회장)은 “무기라는 것은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움직이고, 자신이 고쳐야만 고성능을 유지하면서 비용이 싸게 먹힌다”면서 “기술적으로도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⁵⁰⁾

전후 일본의 항공기산업은 1955~1965년(쇼와 30년대) 라이선스 생산

48) 田中明彦, 앞의 책, pp. 306~307.

49) 防衛生産委員會, 「今後の航空装備品の研究開発-防衛廳 前 航空幕僚長 大村平」, 『防衛生産委員會特報』, 第228号(1989.2), p. 42~53.

50) 「FSX 国産化, 強く要求」, 『朝日新聞』, 1986. 7. 18.

으로 선진기술을 최대한 습득했고, 1965~1975년(쇼와 40년대)에는 국내개발·생산을 보다 본격화했으며, 1975~1985년(쇼와 50년대)은 국제 공동개발을 진전시키는 단계였다. 따라서 1952년 이후 방위청이 구입한 3,000대의 각종 항공기도 라이선스 생산이 75%, 국내개발은 18%, 나머지(200대 정도)는 직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독자개발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자, 미국은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⁵¹⁾ 경제대국을 일궈 낸 일본의 기술력으로,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마저 일본이 위협하려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나타났다. 게다가 미국은 거액의 대일 무역적자를 안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이 전투기 개발 대신 미국산 F-16이나 F-18을 구입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⁵²⁾ 그러나 1983년 6월 『방위생산위원회 특보』에는 미·일 공동개발을 예상한 듯한 내용이 감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군사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서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군사기술은 전무한 상태다. 최근 일본은 전자, 레이저 기술 부문에서 혁신적 진보를 이루고 있고, 일부 미국 관료들은 일본의 기술력에서 얻을 것이 있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 종래 군사기술 이전은 오로지 미국에서 일본으로의 일방통행식이었다. 그러나 미국무성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조만간 무기수출 금지정책의 예외로서 미국으로의 군사기술 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⁵³⁾

51) 아사히신문은 1985년 미 국방성이 FS-X 개발에 대해 다음 3가지 면에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첫째, 미국이 만드는 전투기는 1,000대 단위, 일본은 100대 단위라서 일본이 제작하면 단가가 비싸져 투자효율 면에서 다른 곳에 투자하고 싶어할 것이다. 둘째,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 때문에 FS-X를 개발하는 것이 이 원칙을 파기하는 것일 것이다. 셋째, 일본이 FS-X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미국과의 안보조약과 동맹국 상호 시설서비스 이용(interoperability)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었다. 防衛生産委員会, 「今後の航空装備品の研究開発-防衛庁前 航空幕僚長 大村平」,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228号(1989.2), p. 44~46.

52) 田中明彦, 『安全保障戦後50年の摸索』(東京: 読売新聞社, 1997), p. 307.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해 상황이 급박해진 항공업계는 기술개발본부, 방위청 등 국내개발 옹호자들과 함께 일본 항공기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⁵⁴⁾ 항공업계와 방위청은 F-15의 경우에는 F-4를 계속 생산하고, FS-X의 경우에는 F-15를 계속 생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⁵⁵⁾ FS-X의 국내개발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항공업체 5사는 더욱 결속을 다져 나갔고, 사내(社内)에 연구회를 조직해 'FS-X 민간합동연구회'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외국모델을 배제한 방식의 독자 전투기 개발이라는 일본정부의 결정은 이 계획이 가진 경제적·기술적 의미, 그리고 당시 미·일 간의 심각한 무역역조를 배경으로 한 미국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미·일 무역에서 일본이 얻고 있는 엄청난 대미 흑자에 대한 미국 측의 강력한 불만 때문이었다.

1987년 9월경 일본정부는 나카소네 총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방위청장관인 구리하라 유코(栗原祐幸)는 미국의 전투기를 모델로 한, 미·일 공동개발이라는 타협책을 고안했다. 공동개발이 된다면 일본의 기술이 미국으로도 이전되는 효과도 있어, 1983년 나카소네 총리가 결단한 대미 무기기술 공여의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는 아이디어였다.

특히 미국은 미·일 간 현안이었던 쇠고기, 오렌지의 대일수출, 일본산 반도체의 수입통제, 간이 신공항 건설 참여, 도시바기계의 코콤

53) 防衛生産委員会, “わが国の航空機産業の関する米国会計検査院の報告-米国の軍事公同生産計画が日本の民間航空機産業の発展に寄與,”『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199号(1983.6), pp. 20~28.

54) Mark Lorell, *A History of U.S. Japan Collaboration on the FS-X Fighter*(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 1996), pp. 110-111; “三菱重工など5社, FSX自主開発へ連合: 米主導に巻き返し,”『日本経済新聞』, 1987. 1. 15.

55) Michael W. Chinworth, *Inside Japan's Defense: Technology, Economics & Strategy*(New York: Brassey's(U.S.), 1992), pp. 137-138.

(COCOM) 위반사건⁵⁶⁾ 등 FS-X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끌어들이어 FS-X 사업 참여를 위해 일본을 흔들기 시작했다. 결국 1987년 6월 30일 와인버저 장관은 구리하라 방위청장관과 도쿄에서 회담해 일본의 국내개발안을 누르고 미·일 공동개발이라는 절충안을 성사시키고야 만다.⁵⁷⁾

결국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1987년 10월 23일 안전보장회의에서 FS-X사업을 미·일 공동개발에 의한 F-16C 모델의 개조로 결정했다. 1987년 10월 미·일 방위수뇌회담에서 그 같은 취지의 합의가 나오고, 1988년 11월 말 F-16을 플랫폼으로 한 공동개발에 양국이 합의했다.

FS-X 사업이 미·일 공동개발로 낙착되자, 방위생산위원회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당 위원회는 일찍이 FS-X 프로그램을 국내개발로 하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방면에 요청했으나, 결국 1987년 10월 F-16을 개조·개발하는 것으로 결정 났다”면서 “개발의 조건과 일정은 정부 간 교섭에 맡길 것이지만, 당 위원회는 우수한 전투기를 생산하기 위해 계속 관계 방면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⁵⁸⁾

방위생산위원회는 ‘일감’과 관련해 큰 관심을 가졌다. 특히 일본이 원하는 F-16 개조의 핵심은 주 날개를 일본이 생산하는 것이었다.⁵⁹⁾ 만약 미국 회사들이 개발작업의 35% 또는 그 이상이 작업을 차지하게 되면, 항공 전자장비의 개발생산은 거의 일본 회사들이 맡을 것이기 때문에, 기체

56) 1987년 도시바기계 임원 2명이 1982~1984년에 걸쳐 잠수함의 고성능 스크류를 제작하는 공작기계를 구소련에 수출한 일로 체포된 사건이다.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시대에 서방국가들은 공산권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만들어 군수물자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400여개의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산권에 수출하려면 코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도시바기계는 이를 무시하고 소련이 입수하고 싶어했던, 원자력잠수함의 소음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기계를 판매했다.

57) Michael W. Chinworth, 앞의 책, pp. 145~147.

58) 防衛生産委員会, 「昭和63年度防衛生産委員会總會ならびに同記念パーティを開催」,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225号(1988.10), p. 3.

59) 김기석, “FS-X, 미일공동개발사업의 문제점,” 『국방과 기술』 Vol.128(1989년 10월호), p. 14.

대부분의 제작은 거의 미국 회사들이 차지하게 될 판이었다. 일본의 항공기 업체들은 향후 FS-X가 일본의 국내 항공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애를 썼다.

1989년 1월 12일 미국은 F-16 기술 가운데 일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여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라이선스 협정을 체결했다. 결국 게이단렌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독자적인 연구개발팀을 출범시킴으로써 일본정부를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작업량 조정에 있어서 미국 측의 40% 작업량 주장에 대해 35~45%라는 다소 느슨한 형태로 작업량을 결정한 점, 그리고 F-16 제작기술 가운데 일본 측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공여를 약속받음으로써 일본 방산업계로서는 공동개발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대부분 관철시켰다.

일본정부와 항공업계의 본심은 FS-X 프로젝트로 항공기 생산능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상용기를 개발해 여객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이었다. 양국 의회가 기술이전을 둘러싸고 자존심 싸움까지 벌인 끝에 1989년 5월 오자와 이치로 관방장관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FS-X 사업으로 탄생한 F-2 전투기는 신기술 가운데 하나인 탄소섬유 복합재료(CFRP)를 사용해 일체성형주익을 채용했고, 2006년까지 69대를 양산해 실전 배치했다.

4. 국산화 역량 확충과 무기수출 3원칙의 폐지

2000년대 들어 일본 경제는 장기침체로 빠져들었고, 방산업체들의 경영악화는 심화했다. 방산업계는 게이단렌을 주축으로 무기수출 3원칙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000년의 게이단렌의 제언은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이 구조조정을 일단락하면서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것과 때를 맞춘 것이었다.

게이단렌 제언은 일본의 방산시장 경쟁력이 영원히 구미 제국을 따

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1995년보다 훨씬 심하게 표출하고 있다. 예컨대 제언 1장 마지막 부분인 ‘국제적인 방위산업의 통합과 국제적 제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구미에서는 방위예산의 삭감 와중에 방산기업의 통합·재편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미국 방산기업과 유럽 기업의 제휴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방위장비품의 국제적인 공동연구와 개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방산기업도 세계의 움직임으로부터 고립돼 기술기반을 유지해 가는 것은 곤란하며, 기술기반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으로 미국 방산기업 등과의 제휴와 공동개발 등에 돌 필요가 있다.”⁶⁰⁾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미국 군수업체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의향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의 요망서에서는 ‘공동 연구개발·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0년 제언에서는 ‘항공기 엔진, 유도무기 등 첨단기술을 입수하기 위해 미국 방산기업 등과 기브앤테이크 방식의 제휴가 필요하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⁶¹⁾ 1997년 1월 미·일 안전보장산업포럼이 제1회 모임을 가진 것은 양국 간 군수산업의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화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이단렌은 최근까지 방위대강의 수정과 함께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 내지는 폐지를 요구하며 1995년의 요망서, 2000년의 제언, 2004년 의견서, 2010년 요망서를 발표했다. 1995년 요망서를 시작으로 2004년 게이단

60) 日本經濟団体連合会, 「次期中期防衛力整備計画についての提言」, 2000. 9. 19.

61) 防衛生産委員会, 「次期中期防衛力整備計画についての提言」,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261号(2000.10), pp. 3-5.

렌은 ‘향후 방위력 정비의 방향에 대해’라는 의견서를 공표했다.⁶²⁾

의견서는 무기수출 3원칙으로 인해 미국 등 방산 강국과의 무기 공동개발과 기술개발에 제약이 따르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방산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이단렌의 의견서 공표에 대해 정부는 일주일 만인 2004년 7월 27일 방위성 간담회 제7회 모임에서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을 포함한 보고를 9월 중으로 매듭짓는다”고 발표함으로써 게이단렌의 요구에 즉각 반응했다.⁶³⁾ 이어 일본 고노 내각은 그해 11월 관방장관의 담화형식으로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방침을 밝혔으며, 미국과 전투기용 비상탈출용 사출 좌석(ejection seat) 공동개발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기본원칙을 대폭 완화했다.

2009년 7월 게이단렌은 ‘일본의 방위산업 정책의 확립을 위한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한 재검토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그해 말 결정되는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의 책정에 대해 방산업계의 의견을 집약해 내놓은 것이다.

게이단렌은 보고서에서 “해외로부터 일본의 무기와 관련기술에 대한 개방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를 적극 검토해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전통적 우방이자 방산 선진국인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호주 등과의 국제 공동개발과 생산협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방산수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이단렌은 2010년 7월 20일에도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향한 제언’을 각각 공표하며 유럽 국가들과 첨단무기의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1967년의 무기수출 3원칙에 이어 1976년 무기수출에 관한 정부통일견

62) 日本経済団体連合会, 「今後の防衛力整備のあり方について－防衛生産技術基盤の強化に向けて」, 2004. 7. 20.

63) 『日本経済新聞』, 2004. 7. 28; 『朝日新聞』, 2004. 7. 28.

해에서 밝힌 엄격한 무기수출 3원칙의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⁶⁴⁾

게이단렌은 무기수출 3원칙에 의해 일본 방위산업체들이 국제 공동 개발에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기술쇄국(技術鎖國) 상태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구미 제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5년 요망서로부터 2009년의 제언까지 나타난 일본 게이단렌을 중심으로 한 방산업계의 요구는 일본정부가 적극 호응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게이단렌의 요구는 대체적으로 방위비의 증액, 민생기술의 군수전용의 필요성, 공동연구·개발과 생산을 위한 환경정비, 우주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게이단렌의 요구에 대해 정치권 차원에서도 무기수출 3원칙 문제를 주요 어젠다로 다루기 시작했다. 2004년 1월 당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헤이그 연설에서 무기수출 3원칙의 부분적 해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무기 공동생산을 촉진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 9월 이후 집권한 민주당은 무기수출 3원칙에 공감했다. 2010년 5월 8일,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방위성 정무관을 역임한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는 “방산업체들이 무기수출 3원칙의 부정적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8월 민주당 정부가 조직한 안보정책 관련 자문기구인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여러 방위정책에 관한 제언들을 포함하면서,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지역 내에서 한국과 호주 등 안보협력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 일환으로 종전에 견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타국에의 무기

64) 日本經濟団体連合会, 「国家戦略として宇宙開発利用の推進に向けた提言」(2010.4.12) 및 日本經濟団体連合会, 「新たな防衛計画の大綱に向けた提言」 2010. 7. 20.

공여와 수출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⁵⁾

그러나 2010년 12월에 공표한 ‘방위계획대강 2010’에는 당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자신의 결정으로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게이단렌은 정부가 방위계획대강을 공표한 이후에도 무기수출 3원칙의 변경을 요구하는 제언을 계속 이어 갔다.

2011년 7월 6일 방위성 자문기구로서 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 등 주로 학자들로 구성된 방위생산기술기반연구회는 무기수출 3원칙이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과 생산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의 개정을 제언했다.⁶⁶⁾ 민주당의 실력자였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정조회장도 2011년 10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해, 전투기 등 국제 공동개발과 공동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 이후 일본 방산업체들은 자민당과 민주당 등 유력 정당들 사이에서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 필요성을 활발하게 제기했고, 이를 통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맹국인 미국도 이 원칙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보냈다. 1998년 이후 미국은 일본과 미사일방어체계(MD) 공동연구를 시작하면서 일본의 첨단 제조업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싶어했다.

2007년 공표한 ‘아미티지-나이 리포트’가 일본의 대미 무기수출 금지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보잉 등 미국의 방위산업체들도 1996년 이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의 대표적인 방산업체들과 결성한 안보협력을 위한 미·일방위산업포럼(US-Japan Industry Forum for Security Cooperation)을 통해 무기 공동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⁶⁷⁾

65) 新たな時代の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 “新たな時代における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将来構想: 「平和創造国家」を目指して,” 2010. 8.

66) 『朝日新聞』, 2011. 7. 7.

67) Christopher W. Hughes, *Japan's Remilitarization*(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2004년을 전후로 미·일 양국은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의 SM-3 요격미사일 개발에서 양국 간 기술협력을 발전시켰다. 2011년 6월 미·일 양국은 공동개발하고 있던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2A를 일정한 조건하에 제3국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합의·발표했다.⁶⁸⁾

〈표 1〉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과정

자료: 경제산업성(2014.5).

항목	연도	주요 내용
범용품에 대한 예외 적용	1981	• 민간검용 물품에 대해 최초로 예외적용 시도
대미(對美)무기기술 제공	1983	• 나카소네 내각, 미·일 안보체제 결속 위해 미국에 무기수출 3원칙 예외화 조치
미·일 물품 및 역무 상호제공협정 체결	1996	• 무기 예비품 및 구성품에 대한 예외 적용
이라크 지원법 관련	2003	• 인도적 지원활동 및 안전보장 지원활동에 필요한 무기의 수출
신방위대장 책정 관련	2004	• 탄도미사일방어(BMD) 시스템에 관한 미·일 공동기술 연구가 공동개발 및 생산으로 발전될 경우,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분류
인도네시아 순시함 공여	2006	• 말라카 해협 테러 퇴치 위해 군용선박인 순시함 공여
보급지원법 관련	2007	•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중 하나인 '보급지원법'에 해당하는 활동은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 적용
대해적 작전 및 사법 경찰 활동	2009	• 소말리아만, 아덴만에서의 자위대의 대해적 작전 및 해상보안청 등 사법경찰활동에 필요한 수출은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 적용
노다 요시히코 내각의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발표	2011	• 방산장비 등에 관한 수출 가이드라인의 발표 • 미국 이외의 NATO 가맹국, 호주 등 전 우방국들과의 국제공동개발 및 생산협력 가능
아베 신조 내각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결정	2014	• '구(舊) 3원칙'을 대체하는 '신(新) 3원칙'으로 금수 대상국 및 이전 인정 조건 등을 재규정 • 적정관리가 가능할 경우, 무기수출 인정범위와 조건을 명시

Strategic Studies, 2009), p. 75.

68) 『朝雲新聞』, 2011. 6. 23.

2011년 12월 27일,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방위장비품 등의 해외 이전 에 관한 기준'에 대한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서 일본은 1967년 사토 내각 이후 공식적으로 견지해 오던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밝혔다.⁶⁹⁾ 결국 일본 내각은 2011년 12월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고, 우방국과의 무기거래와 국제 공동개발 및 생산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방산장비 등에 관한 수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입국의 수출통제 (export control) 체제가 안정적일 경우 해당 국가로의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방산수출 대상지역을 미국을 포함한 유럽지역으로 크게 확대할 수 있었다.

1983년의 대미 무기기술 공여, 2004년의 탄도미사일방어(BMD)에 관한 미국과의 공동연구·개발 등 미국에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무기수출 3원칙 등의 개별적 예외화 조치를 '포괄적 예외화' 조치로 확대함으로써 미국 이외의 국가-NATO 제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과의 공동개발과 생산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수출 가이드라인'이라는 형식의 이 담화에서는 일본정부는 "기본정신은 견지하겠다"며 외견상 무기수출 3원칙을 붙들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기수출 3원칙이 외형적으로도 완전 폐기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베 신조 내각에서였다. 2014년 4월 1일 아베 내각은 적정관리를 통해 무기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결정했다.

아베 정부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즉 대인지뢰금지조약 위반국이나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기수출을 금지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69) “防衛装備品等の海外移転に関する基準”についての内閣官房長官談話(2011.12.27).
<http://www.kantei.go.jp/jp/tyokan/noda/20111227DANWA.pdf>(검색일: 2018.5.20.)

판단에 따라 무기수출을 인정한다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공표했다.

아베 내각은 신원칙에서 “무기수출 3원칙은 평화국가의 길을 걷는데 일정 역할을 해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 시대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원칙의 결정에 따라 과거 불분명한 방위장비 이전 조건들을 보다 구체화했으며, 결과적으로 일본정부가 자국 기업의 방산수출을 사실상 전면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기수출 3원칙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전환하면서 명칭 상 ‘무기’ 대신 ‘방위장비’라고 표현함으로써 적용대상의 범위와 폭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과거 예외적으로 수출을 인정했던 종래의 방침을 대폭 수정해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무기수출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아베 내각의 무기수출 3원칙 철폐로 전후 일본의 무기수출을 제약하고 있던 비군사화규범의 대표적인 무기수출 3원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V. 맺는말

『방위생산위원회 특보』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전후 일본 방위정책 70년의 형성과정에서 방산업계의 역할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가케무샤(影武者, 대역)’에 비견할 만하다. 게이단렌은 방위청장관을 지낸 바 있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후나다 나카 중의원 의장 등 일본 정·관계의 실세들과 강한 스킨십을 유지하면서 무기수출 3원칙의 철폐를 강하게 요청하는 등 방위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케무샤 역할을 수행했음이 논문의 특보를 통해 드러난다.

요컨대 방위생산위원회의 영향력은 방위성(방위청)을 통해 주로 이뤄지며, 방위성과 재계의 접점(接點)에 해당하는 방위장비국산화간담회,

심의회, 위원회와 같은 외곽조직, 즉 정부 부처와 민간기구를 연결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계 원로로 구성된 방위생산위원회 간부들은 정부 성청, 특히 방위산업의 비대화를 우려한 재무성(대장성) 등 관료집단의 반대를 설득해가며,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가는 데 성공했다.

1967년 무기수출 3원칙 선포 이후 일본정부는 비핵 3원칙, 전수방위의 원칙 등 비군사회규범을 쏟아내며 방산업계에 큰 어려움을 안겼다. 그러나 방산업계는 굴하지 않고 국산화를 통해 기술력을 높이는 한편, 게이단렌을 통해 경제산업성(통산성)과 의회, 그리고 방위산업 재건에 관심을 가진 보수인사들의 인맥을 적극 활용해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한다. 특히 1972년부터 시작된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이 결정되는 과정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4차방을 계기로 일본의 방산업체들은 본격적으로 자주방위를 추진하며 기술축적을 통해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다.

특히 1982년 나카소네 총리가 집권하면서 1985년을 시점으로 59중기 업무견적을 추진한다. 나카소네 총리는 방위정책에 자신의 자주방위 구상을 담으면서 방위산업계는 활로를 뚫는다. 미국은 나카소네 내각에게 미·일 안보결속을 빌미로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요구했고, 재계는 재계대로 나카소네 내각과의 스킨십을 통해 방위비의 GNP 대비 1%의 벽도 뛰어넘고,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도 이끌어낸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경제적 전성기를 구가하며 방위산업의 기술력 축적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계대상이 된 일본은 F-2 전투기 공동개발에서 미국과 한판의 힘겨루기를 한다. 그동안 축적한 항공기술력을 바탕으로 전투기 독자생산에 나섰던 일본의 항공기 업체는 미국의 압력으로 독자생산이 좌절되자 공동생산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 민항기 제작으로 기수를 돌린다.

『방위생산위원회 특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후 일본의 방위 산업은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상황적 변화를 잘 포착한 재계의 움직임이 주효했다고 할 것이다. 『방위생산위원회 특보』를 통해, ‘일본의 방위생산위원회가 일본의 방위정책 결정에 주요한 행위자(actor)로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의 비군사화 규범들의 변화, 나아가 방위정책의 변화에서 일본 방산업계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했다고 주장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방위생산위원회가 일본의 방위생산과 방위정책 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베 정권 들어 등장하고 있는 우경화 정책들 가운데 최근 발표된 ‘무기수출3원칙 폐지’ 조치는 그간 내수에만 묶여 있던 일본 방위산업의 대상 범위를 세계 무대로 확대해 향후 무기체계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전 세계 주요 수출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日本空團

논문 투고일 : 2018년 5월 20일

논문 심사일 : 2018년 6월 11일

게재 확정일 : 2018년 6월 15일

참고문헌

- 고가 준이치로·오오타 마코토, 『일본을 움직이는 세계의 싱크탱크 經團連』, FKI미디어, 2000.
- 김기석, 「FS-X, 미일공동개발사업의 문제점」, 『국방과 기술』 Vol.128 10월호, 1989.
- 김진기, 『일본의 방위산업: 전후의 발전궤적과 정책결정』, 아연출판부, 2012.
- 김창모·윤자영·윤명현·이진면, 「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방위산업의 발전 전망」,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14-354』(2014. 6).
-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다나카 아키히코·이윅덕 역, 『戰後 일본의 안보정책』, 중심, 2002.
- 박영준, 『제3의 일본』, 한울, 2008.
- 오동룡, 『일본인도 모르는 일본 자위대』, 중앙M&B, 2008.
- 오동룡, 『일본의 비군사화규범 형성과 변천과정에서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 영향력 연구』, 국방대 박사학위논문, 2015.
- 임상민, 『전투기의 이해(상)』, 이지북, 2005.
- 최종철, 「미국의 패권변형과 무기이전 정책」, 『국제정치논총』 제33집 1호, 1993.
- 하영선 외,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 한승주, 「일본의 대잠초계기 선정에 관한 논쟁」, 『국제정치논총』 제16집, 1976.
- 한용섭, 『국방정책론』, 박영사, 2012.
- 현인택, 『한국의 방위비』, 한울, 1991.
- 후지와라 아키라·엄수현 역, 『日本軍事史』, 시사일본어사, 1994.
- 浅川大作, 「日米技術フォーラム」, 『月刊 JADI』 7月号, 1994.
- 足立浩, 「武器輸出解禁の背景と軍需産業界の狙い」, 『KENZAI』(2012. 10), 2012.
- 井上和彦, 『国防の真実-こんなに強い自衛隊』, 双葉社, 2007.
- 安部晋三, 「新しい国へ・美しい国へ」, 『文芸春秋』 文春新書 903, 2013.
- 五十嵐武士, 『平和国家と日本型外交』, 東京大学出版会, 1999.
- 石破茂, 『日本人のための「集团的自衛権」入門』, 新潮新書558, 2014.
- 猪口孝·岩井奉信, 『「族議員」の研究-自民党政権を牛耳る主役たち』, 日本經濟

- 新聞社, 1987.
- 上田哲, 『戦後60年軍拡史: 1945~2006』, DATA HOUSE, 2006.
- 植村甲午郎 伝記編輯室 編, 『人間植村甲午郎一戦後経済発展の軌跡』, サンケイ出版, 1979.
- 江畑謙介, 『日本の軍事システム-自衛隊装備の問題点』, 講談社, 2001.
- 大嶽秀夫, 『戦後防衛問題資料集: 第一巻 非軍事化から再軍備へ』, 三一書房, 1991.
- 金森政雄, 「日米防衛技術協力では日本の主体性を」, 『経団連 月報』, 1989. 1.
- 小山弘健, 『日本軍事産業の史的分析』, お茶の水書房, 1972.
- 権鎬淵, 『シベリアン・コントロールからみた日本の防衛政策の決定過程』, 博士学位論文,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 1995.
- 桜川明巧, 「日本の武器輸出政策-武器輸出三原則の国会論議をめぐって-」, 『国際政治』 第108号, 1995.
- 佐道明広, 『戦後日本の防衛と政治』, 吉川弘文館, 2003.
- 田中明彦, 『安全保障:戦後50年の摸索』, 読売新聞社, 1997.
- 手嶋龍一, 『ニッポンFSXを撃て-日米冷戦への導火線・新ゼロ戦計画』, 新潮社, 1991.
-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団体連合会三十年史』, 経済団体連合会, 1978.
- 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済団体連合会五十年史』, 経済団体連合会, 1999.
- 防衛生産委員会, 『防衛生産委員会 10年史』, 防衛生産委員会, 1964.
- 三菱重工業株式会社社史編纂さん委員会, 『海に陸にそして宇宙へ: 続三菱重工業社史1964-1989』, 三菱重工業株式会社, 1990.
- 森本正崇, 『武器輸出三原則入門-「神話」と実像』, 信山社, 2012.
- 防衛生産委員会, 「中曾根防衛庁 長官就任祝賀ならびに防衛庁 首脳と懇親パティ: 防衛産業関連5団体共催」,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122号, 1970.
- 防衛生産委員会, 「次期防衛力整備問題にかんするわれわれの見解」,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125号, 1970.
- 防衛生産委員会, 「防衛庁との常設懇談会設置なる」,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126号, 1970.
- 防衛生産委員会, 「安全保障問題について講演会開催-防衛庁久保事務次官講演要旨」,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151号, 1975.
- 防衛生産委員会, 「防衛力整備問題に関するわれわれの見解(提言)」,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155号, 1976.
- 防衛生産委員会, 「防衛庁首脳との懇談会を開催」, 『防衛生産委員会特報』 第172

号, 1979.

防衛生産委員会, 「56中業に関する説明会を開催」, 『防衛生産委員会特報』第195号, 1982.

防衛生産委員会, 「わが国の航空機産業の関する米国会計検査院の報告-米国の軍事公同生産計画が日本の民間航空機産業の発展に寄與」, 『防衛生産委員会特報』第199号, 1983.

防衛生産委員会, 「59中業に対する要望」, 『防衛生産委員会特報』第217号, 1985.

防衛生産委員会, 「昭和60年度防衛生産委員会総会ならびに記念パーティを開催」, 『防衛生産委員会特報』第210号, 1985.

防衛生産委員会, 「中期防衛力整備計画に関する説明会を開催」, 『防衛生産委員会特報』第215号, 1986.

防衛生産委員会, 「経団連・防衛生産委員会昭和60年度事業報告」, 『防衛生産委員会特報』第217号, 1986.

防衛生産委員会, 「昭和62年度防衛生産委員会総会ならびに同記念パーティを開催-SDI研究計画への参加に関する当面の要望について」, 『防衛生産委員会特報』第221号, 1987.

防衛生産委員会, 「昭和63年度防衛生産委員会総会ならびに同記念パーティを開催」, 『防衛生産委員会特報』第225号, 1988.

防衛生産委員会, 「今後の航空装備品の研究開発-防衛廳前航空幕僚長大村平」, 『防衛生産委員会特報』第228号, 1989.

防衛生産委員会, 「次期中期防衛力整備計画についての提言」, 『防衛生産委員会特報』第261号, 2000.

Abegglen, James C., "The Economic Growth of Japan," *Scientific American*, Vol.222, No.3, 1970.

Berger, Thomas, "From Sword to Chrysanthemum: Japan's Culture of Anti-Militar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17, No.4, 1993.

Chinworth, Michael W., *Inside Japan's Defense: Technology, Economics & Strategy*. New York: Brassey's(U.S.) Inc, 1992.

Chitoshi, Yanaga, *Big Business in Japanese Politics*, Yale University Press, 1968.

Green, Michael J., *Arming Japan: defense production, alliance politics, and the post-war search for autonom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Hughes, Christopher W., *Japan's Remilitarization*.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9.

- Johnson, 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 Lorell, Mark, *A History of U.S.-Japan Collaboration on the FS-X Fighter*.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 1996.
- Mochizuki, Mike M., "Japan's Search for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8, No.3(Winter, 1983-1984), 1983.
- Oros, Andrew L., *Normalizing Japan: Politics, Identity, and the Evolution of Security Practi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2008.
- Pyle, Kenneth B., *Japan Rising: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New York A Century Foundation Book, 2007.
- Samuels, Richard J., *Rich Nation, Strong Army: National Security and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Japan*.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Abstract

Keidanen's Role in the Japanese Defense Policy Decision Process during the Post-Cold War

Dong-Ryong Oh

As seen in the Defense Product Committee's special report, senior members of the Defense Production Commission urged opposition from bureaucrats, including the Finance Ministry, to the fear of non-representation of the defense industry.

The 4th Defense Force Improvement Plan, which began in 1972, is noteworthy in this respect. On the occasion of the fourth round of defense, Japanese defense companies will push for self-defense in earnest and achieve rapid growth in quality through technological accumulation.

In particular, with Prime Minister Nakasone in power in 1982, Nakasone put his own defense plan in place, and the defense industry will find a way out. In this opportunity, the business community will continue to engage with the Defense Ministry to help Prime Minister Nakasone overcome the barriers of 1 percent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and ease the three principles of arms exports through the U.S.-Japan Technology Supply Agreement.

From the 1980s to the late 1990s, Japan enjoyed an economic heyday and became a U.S. alert based on the technological prowess of the defense industry. Japan is competing with the United States over the production of F-2 fighter jets. Japan's aircraft industry, which has started developing its own fighter jets, is disappointed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collapsed under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and concluded joint production. However, the business community plans to build up technological skills through joint development and then try to build a civil aircraft.

As can be seen from the Defense Product Committee's special report, Japan's post-war defense industry has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e movements of businesses that have captured such changes well, both through the Cold War and the post-Cold War. According to this study, the basis for the hypothesis that Japan's Defense Production Commission played a major role in Japan's defense policy decisions could be found.

Key words

Defense Policies, Defense Industries, Trade Union, Defense Production Committees, DPC Special Reports, Three Principles on the Export of Weapons, Japanese Defense Plan, Mid-term defense plan